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 위원회

건강연대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140-5호 3층 / 전화 711-0835 / 전송 711-0834 / 홈페이지 www.konkang.or.kr / E-mail kkyd99@hitel.net

날 짜 : 2001년 4월 26일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복지 담당기자

제 목 : "부당한 보험료인상 반대, 수가인하 및 불법청구 근절,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노동, 농민, 시민 촉구대회" 개최 보도자료

1.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건강보험공대위)는 2001년 4월 26일 (목) 오전 10:30에 서울역 광장에서 참여단체 회원 500여명이 참가하여 "보험료 인상 반대, 수가인하 및 불법청구 근절,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노동, 농민, 시민 촉구대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집회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광훈의장은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 발언이 정부 부처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수가인하, 부당허위 청구 근절, 국고지원 확대, 보험적용 확대없는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허영구 건강보험공대위 위원장은 울산, 대전, 광주 등 각 지방에서도 노동,농민,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보험료인상반대, 수가인하 요구를 위한 서명운동과 환자 알권리 확대 요구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국민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책임 있는 보험재정 대책을 촉구하였다.

3. 참여연대, 서울YMCA,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복지부장관이 의료계가 반발하자 의료기관 수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불법 청구 근절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을 요구하였다. 또한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보험료 지출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 실사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여 실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나아가 보험재정의 안정화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행위별수가제 폐지, 공공의료 확대 등 의료체계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4. 이날 집회가 열리는 서울역 앞에서 건강보험공대위 참여단체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하면서 보험료인상 반대, 수가 재조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처방전 2장 받기, 처방전 모으기, 진료비, 약제비 내역서와 영수증 받기 캠페인을 동시에 전개하였다. 이에 앞서 노동,농민,시민단체들은 4월 19일 기자회견과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광화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하여 부당한 보험료인상 반대, 수가인하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과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대회결의문>

보험료 인상 반대, 수가인하 및 불법청구 근절,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노동, 농민, 시민단체 촉구대회 결의문

건강보험 재정상태의 파탄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사회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책임자인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적인 대책을 5월로 연기해 놓은 채,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당허위청구 근절 대책 조차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서자, 복지부장관 스스로 의료기관 과잉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의료계가 허위 부당청구 의료기관 명단을 넘겨받고도 자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노동, 농민, 시민단체들이 이들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요구하자, 공개할 것을 약속해 놓고도 말을 바꾸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뿐이다. 최근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국고지원 50% 약속 이행을 위한 예산 배정에 관해 부처내 협의를 하기는 커녕 보험료 인상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과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건강보험 재정과탄의 책임은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부당하게 수가를 인상하고 의약분업 합의사항을 왜곡하여 보험재정 지출이 확대되도록 한 정부에 있다. 따라서 우리 노동, 농민, 시민단체들은 수가 인하와 허위부당청구 근절 등 획기적인 재정절감 조치와 국고지원 확대, 보험적용 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채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 인하와 불법청구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라.

정부는 우선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의 인하 조치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밝혀진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여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진자 내역 조회가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이 진료내역서와 조제내역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처방전을 2장 발행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보험자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가 부당허위 청구되어 누수되고 있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전문적인 실사를 통한 심사 기능과 의료서비스 질 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현지(간)실사권을 공단에 위임하여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늘리기, 진료내용 조작, 이중청구등의 불법 청구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보건의료체계 개혁에 나서라.

민간의료 중심의 고비용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보험재정위기는 되풀이 될 것이며, 의약분업 시행에서 알수 있듯이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의 진료 확대 유인에 의해 진료비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 새로운 수가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1차의료기관 강화, 의료기관 종별 차등수가제 도입, 공공의료의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보험공대위 참여 노동, 농민, 시민단체들은 이를 위해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뜻을 다시한번 확인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앞에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보험료 인상을 단행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재정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1. 정부는 재정파탄의 원인인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를 즉각 인하하라!
1. 정부는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즉각 공개하고 형사 처벌하라.
1. 정부는 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현지실사권을 공단에 위임하여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라
1. 처방전 2장 발행, 진료비, 약제비 내역서와 영수증 발행하라.
1. 병원경영투명성 확보 위한 병원경영 자료를 공개하라.
1. 지역의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지원을 실시하라. 사측의 부합료 부담을 확대하라.
1. 행위별 수가제 폐지, 1차 의료강화, 공공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를 개혁하라.

2001년 4월 26일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청년의료인회/녹색소비자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1세기생협연대